‘그린암모니아 산업’ 중심지로 키워야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산업 영역서 연구개발 · 도입 준비 시점… 도, 백년대계 핵심자원 활용 고민을”

전북을 ‘그린암모니아 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1일 이슈브리핑 ‘그린암모니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열쇠’를 통해 그린암모니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암모니아(Green NH3)는 탄소 배출 없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생산된 ‘그린 수소’를 이용하여 제조한 암모니아로 수소에너지 확보와 유통을 쉽게 하는 화합물이다.

그린암모니아산업은 그린암모니아 생산·유통과 이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연료전지, 스마트팜, 콜드체인산업, 농생명 산업 등 파생 산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특화 산업으로 검토하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국가식품콜드체인시스템 등 미래핵심산업의 에너지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친환경,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포함한 ‘그린암모니아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현재 그린암모니아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연구개발과 도입을 준비하는 시점이므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미래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북자치도가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가 되기 위한 실증 기반을 선점하여 백년대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RE100, 탄소국경세 도입 등 환경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미래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안보 거점으로 전북자치도의 중요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암모니아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 추진을 위한 그린암모니아 수입단계, 생산?수입 Mix단계, 자립단계 등 3단계 전략을 제안했다. 새만금신항과 배후단지 조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 그린암모니아를 수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발굴과 실증을 해나가면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과 조화로운 미래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은 “그린암모니아산업과 경제성 분석, 전북자치도가 주도하는 그린암모니아산업생태계 TF, 앵커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발전 전략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 원광대병원서 응급의료체계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사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 후 맞는 첫 명절로, 추석 연휴 동안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환자증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지자체 최초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 수당 지급

염영선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가치 · 중요성 재조명 시발점 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유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수당지급 대상자와 지급절차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영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130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발전되고 참여자와 유족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입성 이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하였고 공청회, 5분 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해 왔다.

/이만호 기자

높은 농산물 자급률, 음식관광 신성장동력 삼아야

이명연 도의원 “전북, 음식의 다양성 뛰어나 관련 경험 제공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활용한 음식관광 전략을 제안했다.

이명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타개책의 일환으로 음식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음식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음식관광과 연계해 음식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북자치도의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4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농산물 생산량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컨대 쌀은 15.7%, 보리는 56.7%, 콩은 27.2%, 밀은 41.1%, 고구마는 19%, 배추는 9.1%, 무는 21.6%, 고추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 “높은 농산물 자급률은 전북자치도가 차별화된 음식관광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주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면서, 높은 농산물 자급률과 음식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포지셔닝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3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이라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북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음식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높은 지역이라 지역 고유의 요리법을 비롯한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며, 셋째로 전북의 음식은 푸드 마일리지를 최소화해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연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표방하는 농생명산업 수도와 높은 농산물 자급률을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연계시킨다면 더욱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명연 의원은 그간 치유음식이야말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북자치도만의 음식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해 치유음식 개발을 강조해 왔다.

/이만호 기자

한정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추진단 신설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 · 기행행정위원회)이 지난 10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기후와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전북도가 탄소중립 이행과 연계된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탄소중립추진단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이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요구되며, 경제적 부담과 도전과제도 수반되는 만큼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북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에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산 재생에너지를 새만금산단이나 도내 기회발전특구 등에 공급해 수도권 RE100 기업 이전에 적극 활용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스템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이 갖고 있는 무기인 특례를 통해 한전의 독점적 권한을 이양받아 전력계통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장연국 도의원 “웹 접근성 정보 약자가 누려야 할 권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 보장이 매우 미흡하다”며 “정보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도입”을 적극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도청 및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수십개의 웹사이트 중 극소수만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획득했으며, 반응형 웹 구현 역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회조차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여전히 비반응형 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 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 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2024년산 쌀 수확기 대책 추석 명절 보여주기식 대책”

민주 윤준병 의원, “작년에 실패한 대책 또다시 반복 尹정부 농정 실책 이번 국감서 책임 제대로 물을 것”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당정협의회를 갖고 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하는 등의 쌀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작년 쌀 수확기 대책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적인 대책이자 추석 명절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0일 발표된 20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에 대해 “정부는 금번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만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작년 쌀 수확기 대책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15만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중 10만톤은 농협이 자체 해소하라고 책임을 전가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도 암소 1만 마리 시장격리를 농협에 또다시 전가했다”며, “이미 정부에 의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톤은 그 이행마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협에 책임을 지우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준병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과 한우수급 안정대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 농민들을 우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숫자 부풀리기와 눈속임 등으로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책들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노력 필요”

김슬지 도의원, 간담회 열고 “자경위 · 교육청 등 협력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 · 기획행정위원회)이 지난 10일 도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 황동석 자치경찰정책과장, 손광혁 총경(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장), 이주희 경위(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성폭력팀) 등이 참석해 도내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과 대응 상황, 피해자 보호 대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김슬지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경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4년간 도내 디지털 성범죄가 37건 발생했는데 이중 검거는 18건으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 확대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어렵지 않게 합성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자경위, 교육청,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벼랑 끝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절실”

임승식 도의원, 사료비 인상차액 지원 등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 · 더불어민주당)이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원으로 2021년 645만원보다 180만원이 폭락했고, 2022년 8만9,000호에 이르던 한우농가는 2년 만에 8,000여 농가가 폐업했다. 또한, 지난해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팔 때마다 143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올해는 200만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태라면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에는 빚만 남게 되어 한우농가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으며, 한우 산업 생산 기반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에 해당하는 42만 두를 사육하고,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한우를 키우고 있음에도 경영 위기에 몰린 도내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인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 7월 50두 이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료구입비 125억 원 중 62억으로 전남 지역 전체 한우 사육농가의 76%에 해당하는 1만 2,000호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또한 한우 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비 인상차액을 지원하고, 사료 구매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저능력 암소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 경영비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사육 기간 단축 및 한우 소비 장려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 농가가 증가하면서 한우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